

여성정책동향

- 국내여성정책동향 (2010년 1/4분기)

문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2010 연구과제 소개

-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비혼여성의 일·가족의식변화를 중심으로
- 여성 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V)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 연구

- 2010 연구사업 목록

- KWDI 동정

국내여성정책동향 (2010년 1/4분기)

문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중앙과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국정과제 의제(agenda)와 발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2010년 1분기 여성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의제인 저출산, 일·가정 양립, 고용, 녹색성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여성 고용사정 10년만에 최악

기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육아·가사 담당자,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 취업할 뜻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여성의 고용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월 여성 실업자는 2009년의 28만 1천명에 비해 21만 4천명이나 증가해 50만 명에 이르러 76.2%의 증가율을 보인다. 작년 1월 대비 15만 4천명이 증가해 27.2% 증가율을 보인 남성 실업자와 비교한다면 여성 실업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취업자 수를 보면 여성들의 상대적 어려움이 더 분명해진다. 2009년 1월과 비교해 남성 취업자는 9만 1천 명 증가했으나, 여성은 오히려 8만 6천명 감소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은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 수 증가'라는 양상을 보여 남성들에 비해 더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4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돌봄과 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기능 전문화·체계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 마련 활발

여성 고용 사정이 해가 갈수록 악화되자 국회의원들은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의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지원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려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3일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배우자 출산 휴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상황이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요건을 입양자녀를 포함한 만 6세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강화방안을 담고 있는 이러한 개정 법률안뿐 아니라 법과 실제 현실의 경합 부분을 고려한 하드웨어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부처별 경영평가지침에 일·가정 양립지수를 도입하거나 고용평등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구속력 있는 실행제도를 실시한다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 및 지자체, 다양한 여성 고용 사업에 팔 걷어붙여

여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2010년 1분기에는 특정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고려한 고용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지역별 23개 대학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선정해 여대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훈련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 지정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새일지원본부’ 시범 사업기관 8개소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이 시·군·구 지역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활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여성장애인 원예활동지도사 양성과정, 여성장애인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여성장애인 CONTACT 인력양성과정’ 등 4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도는 결혼이민여성 친화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로 연계시키는 ‘결혼이민자 직업스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은 요양보호사, 다문화이해강사, 유아영

여강사, 제과·제빵사 등 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퍼플잡, 여성고용 문제의 근본적 대책인가

여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 퍼플잡(purple job)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와 함께 퍼플잡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여성부와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3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와 평등을 표방하는 퍼플잡 도입이 “여성고용 문제를 가져오게 된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치에 있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여성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퍼플잡을 시행하기에 앞서 남녀간 임금 격차, 비정규직간의 차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들을 규제하고, 근로감독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퍼플잡은 시행초기라 당위 차원에서 정책이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퍼플잡의 안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출산율 계속 감소, 출산·양육 정책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발표한 『주민등록 기준 서울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2008년에 비해 3.9%(3,703명) 감소해 2007년 이후 신생아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를 통해 2009년 출생아수가 2008년보다 2.1만명 감소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전년 1.19명보다 0.04명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와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및 출생통계에 비춰본다면 그동안 전국 각 시·도에서 시행한 다양한 출산 장려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예산이 2009년에 비해 96억원 가량 삭감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및 저출산 극복 의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및 병역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지원책과 5년 단위의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상태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8년 간 유럽 40여 개국의 출산휴가, 출산수당, 육아정책, 양육지원금 등 모든 출산 장려지원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미미했다는 유엔보고서를 인용하여 저출산 사회의 대안으로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방향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현황

여성부는 남성의사에게 진료받기를 기피하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이 여성의사의 진료를 보다 쉽게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여자의사회와 '성폭력피해자 응급진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야간 응급진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가 여자의사회 전문의들의 도움으로 신속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의료, 상담, 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각 지역에 개소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 피해자(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여성경찰에 의한 수사와 법률지원 등을 24시간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 등으로 심각성이 대두된 아동 성폭력 문제의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 17개 지방청에 원스톱 기동수사대가 조직되었다. 원스톱 기동수사대는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수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동 성폭력 전담팀에 전문심리치료를 포함시켜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사)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 1,766건을 분석해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97.6%가 남성이며, 가해자의 82.8%가 남편/전남편/애인/과거애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폭력 가해의 대부분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현재 이러한 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 정책 및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아내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이 힘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불법 낙태 처벌' 논란 재점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낙태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낙태를 둘러싼 오래된 논

쟁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세 곳을 고발하면서 '불법 낙태 처벌' 논란은 본격화되었다.

여성계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산부인과 병원 고발조치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고 낙태는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문제가 아닌 신체결정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여성계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낙태 금지를 제안한 것에 문제제기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피임 실천을 제고, 비혼 한부모 지원 확대, 불법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 대해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갖지 않고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계는 월 10만원 지원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낙태를 생명 경시 행위와 등치시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여성계의 낙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낙태근절에 대한 찬반토론보다 사회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왜곡된 정책, 사회문화, 극단적인 양극화의 산물인 낙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녹색 성장에 성 주류화 정책을 통합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되면서 도시개발이라는 주류 정책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공간설계를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접근 및 통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건물·시설물을 배치하고, 수목과 조명시설이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아파트 건립 시 여성 친화적 보행로 조성, 야간에도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는 안전귀가로 설치, 손님접대나 공동작업을 위한 공적 장소 확보 등 주택설계에 여성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여성친화 시설 및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숲길 및 무장애광장 조성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숲이나 광장을 이용할 때 가파른 급경사와 계단으로 인해 유모차,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여성, 임산부,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설계를 고려하기로 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녹색 성장에 성 주류화 전략을 개입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

되길 기대한다.

국제기구, 아이티에서의 성 인지적 구조활동 강조 및 북경행동강령 15주년 이행평가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낸 아이티의 구조·구호 활동에 성 인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의 목소리가 높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여성이라는 것이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점이다. 특히 출산을 앞둔 여성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이티 지진 피해 여성을 위한 서비스와 쉼터 마련에 대한 기금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많은 국제기구는 “북경행동강령(1995) 15주년 이행평가 및 제23차 유엔특별총회(2000) 이행평가”를 주요 의제로 한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를 준비하며 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15년 동안의 여성인권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엔공보국(UNDPI)은 “여성과 미디어”,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는 “여성과 환경”,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여성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북경선언 이후 15년 동안 각 영역에서 진행된 여성 지위 및 인권의 변화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 비혼여성의 일·가족의식변화를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A Study on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 연구책임자 : 김혜영
- 공동연구자 : 선보영

한국의 최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저출산의 해법 마련은 우리 사회의 긴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최저출산의 원인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는 만혼의 경향, 즉 혼인의 지체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무엇보다 최근 10년간의 합계출산율과 평균 초혼 연령의 추이는 정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이 그것이다. 200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핵심 가입 연령집단인 25~29세의 여성들의 미혼율은 39.7%에서 59.1%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30~34세의 인구층 가운데 남성의 미혼자 비율이 1995년 19.4%에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41.2%이며, 여성의 미혼자 비율 또한 3배 가까이 증가한 19.1%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같은 미혼자 집단의 지속적인 증가는 곧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작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만 25-3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물론 일과 가족을 위시한 다양한 생활세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여성들의 의식 및 태도, 나아가 이들이 경험하는 결혼 및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은 곧 이들의 결혼진입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일연령대의 미혼남녀는 물론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심층인터뷰와 집단면접을 시도하며, 이러한 사전연구를 거쳐 완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주출산연령대 여성들의 결혼과 일의 의미,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향후 이들의 결혼 및 출산계획 등을 분석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 매력적일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 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 영문 제목 : Development of Indicators on Women with Disabilities
- 연구책임자 : 전기택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성 인지 통계와 장애인 통계가 여성 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여성 장애인의 역량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해석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33조에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3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를 위해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강구와 더불어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서 장애여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 장애인의 정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관련된 통계 및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는 물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 통계는 성별 분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성 고유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성 인지 통계는 아직까지 여성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세부통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장애인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지표를 개발하고, 그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조사, 선행 연구 검토 등을 통해 여성 장애인 지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여성 장애인 지표 및 통계를 작성할 것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 지표 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 영문 제목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Budgeting(Ⅳ): Monitoring on Gender Budget Statement and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 연구책임자 : 마경희
- 공동연구자 : 김영옥, 김영숙, 이선행, 김효선

본원은 2007년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를 중점 연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고 올해는 4차 년도가 되는 해이다. 2010년도의 중점 주제¹⁾는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과 장단기적 발전 방안의 모색이다. 본격적 시행 2년을 맞이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단기적 관점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세부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과정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의 범위를 국회 내에서의 심의과정으로 확대하여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안내서 개발이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많은 주요 5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의 정책에 특화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안내서를 개발하여 담당자의 예산분석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이다.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세부사업 수준의 예산분석 뿐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세출활동의 중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예산 분석에 대한 이해의 확산을 위한 심층 예산 분석이다. 노동, 복지, 문화, 교육, 주택, 금융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의 세출예산과 함께 세입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한다.

1) 첫째의 주제가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방법론, 주요 재정개혁 제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등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했다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1년 앞둔 2차년도(2008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도구와 절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도시행 첫째 인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 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이 되는 국회, 시민단체, 연구자 등 행정부 이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V)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 영문제목 : Study on Policy Paradigm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V): Policy Development for Productive Multicultural Society
- 연구책임자 : 김이선
- 공동연구자 : 정해숙

결혼이주, 노동이주를 위시한 외국인 이주가 급증하면서 한국사회의 기본적 구성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2007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최초로 협동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과정을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과제를 예측하여 부정적 문제의 가능성은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사회 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개발해왔다. 2010년은 협동연구 4차 연도를 맞이하는 해로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을 테마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다문화사회 정책은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여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내지 다문화가족 등을 취약계층 내지 부적응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한국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데 반해,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지니는 독특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사회적 자원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이중 언어 사용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결혼이민자가 지니는 언어적 자질을 활용해 성공한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 일면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독특한 자질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자칫 이주민, 특히 각종 정책 지원이 집중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주류사회의 시각을 환기하는 계기로서 뿐 아니라,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특수성을 긍정적 자원으로 인정하여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적 다문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질적 도약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족의 문화, 언어 자원 활용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과제조차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다문화사회 정책 연구 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이들이 지니는 특수한 문화적, 언어적 자질을 사회적 가치로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가 생산적 방향으로 전개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올 한해 추진될 협동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문화 사용에 관한 연구 2개 과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관련 연구 2개 과제 등 총 4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협동연구로서의 성격을 최대한 살려 연구 진행 과정 중에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 총 4회에 걸쳐 다문화사회정책포럼이 개최될 것이며 9월에는 연구 성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 연구

- 영문제목 : A Study on Expansion and Continuation of a Female Member Career of a Legislative body in a Local District
- 연구책임자 : 김원홍

본 연구는 2006년 6월 제5차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과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방의회란 풀뿌리 민주정치로서 현재 여성의원들이 대부분이 초선인 상태에서 의원경력 수를 늘려나가고, 광역의회 및 국회 등 상급 대의기관으로 여성의원들의 진출이 확충될 때, 바람직한 여성의원들의 정치경력 지속성을 위한 모델이 형성될 뿐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과 관련하여 2009년 5월 현재 기초의회의 경우 447명 중 초선인 경우 423명(지역구: 83, 비례대표: 340명), 재선인 경우 16명(지역구: 16명, 비례대표: 0명), 3선인 경우 6명(지역구: 5명, 비례대표: 1명), 4선인 경우 2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0명)이 있는 실정이다. 광역의회 여성의원 의원들의 경우 85명 중 초선인 경우 76명(지역구: 23, 비례대표: 53명), 재선인 경우 8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1명), 3선인 경우 4명(지역구: 0명, 비례대표: 1명)이 있는 실정임.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국회로 진출한 여성의원 의원들의 경우 18대 국회의 경우 4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3명)으로 남성 16명(지역구 15명, 비례대표 1명)에 비하여 월등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방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 1인 이상 공천할당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의원 의원 경력지속에 대한 관심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존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풀뿌리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이 재선이상 다선의원으로서 의원경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국회 등 상급 대의기관으로 의원경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의 마련과 함께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문화를 개선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는 ①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관련 이론적 고찰, ② 2006년-2010년 남녀의원들의 의원경력 지속성과 관련한 성별 특성으로 연령, 학력, 전직 및 사회경력, 재산, 범죄여부, 의원경력(선수), 소속정당 변화, 정당 경력, 네트워크(학연/혈연/지연) 등을 분석하고 2010년 지방의회 여성후보를 대상으로 의원경력 지속성 및 단절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는 ① 2006년-2010년도 지방의회 남녀의원 경력지속 및 확충과 연계한 기초자료 제공, ②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녀정치인 대상 의원경력 지속 및 단절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치문화 개선 방안 제공, ③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증진 및 확충을 위한 정부, 정당, 사회단체에 역할 제공 등이다. 연구진은 본원의 김원홍 연구위원 등이다.

2010 연구사업 목록

1.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변화와 향후과제
2.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3.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실태와 과제 : 녹색성장관련 전공과 기타 전공간 비교
4.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5.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 비혼여성의 일·가족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6.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7. 가상시장가치추정법(CVM)을 통한 성인지 예산 사업의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8.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 인지적 전략
9. 여성 장애인 지표개발 연구
10.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방안 연구
11.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Ⅰ) :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12.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Ⅳ) : 고용서비스 구조 개선
13.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 성인지 예산 제도 모니터링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14.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15.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Ⅱ)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
16.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Ⅱ) :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17.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18. <협동>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19. <협동>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20. 삶의질전략단 운영

KWDI 동정 (2010. 1 - 3)



2010 여성신년인사회 개최

- 일시 : 2010. 1. 18(월) 14:00 ~ 15: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내용 : 여성부(장관 백희영)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개최한 2010 여성신년인사회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공유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마련 되었다. 사회각계 여성인사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아이티 기금전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2010년 2월 19일 오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을 방문해 본원 전직원의 정성을 담은 아이티 기금을 전달했다.



제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을 주제로 포럼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 2. 24(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발제 내용 :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관련 통계, 자녀를 입양보낸 미혼모의 상실,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 방안



일본변호사연합 선진사례 연구조사단 본원 방문

- 일시 및 장소 : 2010. 2. 25(목) 15:00 ~ 16:30, 3층 회의실
- 사이토 마코토 일본변호사연합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 위원 외 6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김태현 원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양성평등정책 및 본원의 정책연구활동 현황 청취하였다.



제3회 여성정책리더 연찬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3일(수) 11:30,
국회 귀빈식당

여성정책리더 연찬회는 본원의 연구성과와 정책리더의 정책제안을 통해,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본원과 정책리더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제3회 국정성과평가 전문가토론회

-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정책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발표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3일(수) 09:00 ~ 18:00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이 후원한 국정성과평가토론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대토론회 주제발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여성! 베이징 그리고 15주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010년 3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본원 김태현 원장이 “여성의 고용, 경제활동 참여”를 발표하였다.